

소주·삼겹살·유가... 월급빼고 다 올라 '서민물가 비상'

유류세 인하폭 15%→7%로 축소
삼겹살 전월비 16%, 전년비 19% ↑
소주 이어 맥주, 생수가격 등 상승
정부, 상승요인 관찰 부담완화 총력



삼겹살. /픽사베이

서민들이 즐겨찾는 생수, 소주, 맥주, 삼겹살 등 가격이 올랐다. 여기에 휘발유 가격까지 오르면서 서민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행이나 일부 업체의 소주·맥주 공장 출고가 인상 등 물가상승 요인을 면밀히 관찰해 서민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부터 휘발유 기준으로 1당 65원이 오른다. 경유는 1당 46원, 액화석유가스(1PG)는 16원 올라간다. 지난해 정부가 15% 내린 유류세 인하 폭이 이날부터 7%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정부

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의 15%를 내렸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휘발유·경유·1PG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이 맞물려 지난 2월 국내 휘발유 가격은 1l에 1440원대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9월 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휘발유는 1당

123원, 경유와 1PG는 각각 87원, 30원 가량 오르게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영향으로 삼겹살 가격도 크게 올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가 감염되면 100% 폐사한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돼지고기 삼겹살 100g 가격은 2663원으로 한 주 전보다 4.8%(122원) 상승했다. 전달과 비교하면 16.5%(377원), 전년보다는 19.4%(433원) 각각 올랐다. 월별 평균 가격 기준으로는 지난해 5월 삼겹살 100g이 2071원에 팔렸으나 지난달에는 2572원으로 1년 새 24.2%(501원)나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발생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국내 돼지고기

기 수급 및 가격 영향을 아직 미미하다"며 "그러나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국내 가격도 동반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난 1일 서민술인 소주 가격도 올랐다. 하이트진로는 이날부터 소주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격을 6.45% 인상하면서 유통업체의 소주 소매 가격도 인상을 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360ml 병 제품 가격이 1660원에서 1800원으로 140원(8.4%) 올랐다. 두 제품의 640ml 페트병 가격은 2800원에서 3000원으로 200원(7.1%) 뛰었다. 일부 식당



참이슬 오리지널, 참이슬 후레쉬. /하이트진로

에서는 소주가격을 5000원으로 올렸다.

지난달에는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도 주요 제품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오비맥주의 '카스', '프리미어O B', '카프리'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가 평균 5.3% 인상됐다. '카스' 병 맥주 500ml의 출고가는 1147원에서 1203.22원으로 56.22원(4.9%) 올랐다.

생수 가격도 올랐다. 국내 편의점 점유율 2위 GS25는 PB 생수 '유어스(YOU US) 맑은샘물' 500ml 페트병 제품 가격을 기존 500원에서 600원으로 100원 인상했다. 2l 짜리 제품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0원 올랐다. 대형마트도 생수 가격을 올렸다. 홈플러스는 PB 생수 '심플러스(simpplus) 바른샘물' 2l 짜리 제품 가격을 올해 초 300원에서 420원으로 40% 인상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오늘 '어버이날'... 카네이션에 사랑 담아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화훼공판장을 찾은 시민들이 카네이션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 확대

금융위, 창업기업서 '중소기업'으로
자본시장·금융투자법 개정 통과



앞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가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창업투자 회사의 창업 벤처 사모펀드 설립도 허용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F)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운영도 별도 등록절차없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인력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고 별도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펀드매니저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한 경우 혹은 외국 펀드가해지 해산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펀드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의료법안 237개 대기... 100개는 '사업자 책임강화'

국회, 의료기기 사고예방 총력전
무면허 제재수단 등 대책마련

국회가의료기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 책임을 엄중히 하는 모양새다. 규정·준수사항 마련과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설치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7일 국회 의안 분석결과,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은 총 237개로 나타났다. 이 중 100여개는 의료기기 사업자·판매업자, 의료인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대부분 '신설 법안'이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은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를 위해 책임자 준수사항을 규정한다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상시험 기관이 임상시험하거나 임상시험하려는 사람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실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사람은 준수사항이나 규정,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다. 임상시험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

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은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사항 등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시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의료기구·약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이를 정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승인 없이 무단 폐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약품·용품 등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 없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해성 여부 확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도 엄벌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을 규정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판매업자뿐 아니라 판매 회사에 대해서도 엄벌을 물어 제재를 확대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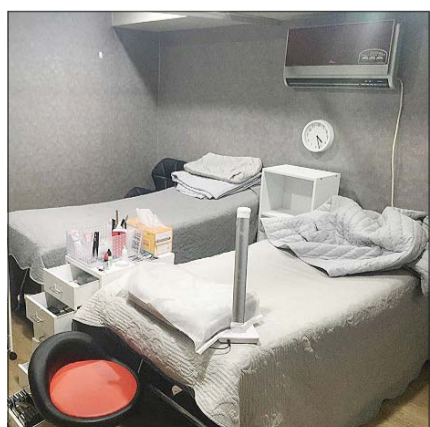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형사처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한다. 하지만 면허증을 빌린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면허증 대여자나 알선자에게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 예방과 국민보건 증진이 목적이다.

의료인의 '주먹구구식' 처방을 막기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법안도 나왔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지·연령금지 등에



국회 본회의장.

/석대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무면허 무허가 적발업체. /경기도

위생관리 사항도 엄격히 하는 모양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위생관리 관련 사항이나 의약품·의료용품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제대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혜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